

심란하다, “여성가족부”

언니네트워크 월레수다모임 첫 번째 [뜨거운 감자] :: 말문 열기

2005-2-23 액션나우팀 시타 (sitafight@freechal.com)

❖ 이 발제문은 언니네트워크 회원들의 내부산출물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니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새로운 정책영역의 설정과 정책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갈등예방과 모부자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을 (가칭)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여성가족부 개편 관련 여성부 홈페이지 2004-12-17 기사 중)

"성폭행과 같은 민감성을 지닌 인권 침해 문제는 인권위에 맡기고 여성부는 가족적이며 돌봄(caring)의 분야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한혜정, 월간 {인권} 2005-1월 인터뷰기사 중)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해야 한다. 출산, 보육 업무 같은 경우 모자보호 측면에서 보건정책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다. 남녀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 역시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로 넘어갔는데, 여성부는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2005-1-24 국회 비공개 회의석상에서의 발언, 출처 : <시민의 신문> 2005-1-26일자)

가족부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여성은 가족의 일원이니까?! 가족은 남성,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 들어가니까. 여성적인 관점에서만 정책을 집행한다면 가족의 다른 성원은 어떤 처지에 처할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각정하는 이, 2004-12-23)

공평하게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왜 자꾸 여성만 가족에 일원입니까 (id=남성가족부추진위, 2004-12-27)

지장관 하늘이 무섭지 않겠는가. 레즈비언 연합회 만들어 놓고 뭐가 그리 좋다고 떠드냐.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부냐. 남성들은 그럼 뭐냐. 이 썩을 것들아. 양성평등 주장하면 난리 치던 때가 엇그제 같더라. 성 차별적인 단어로 완전히 남성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단체를 다시 만드냐.(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독신자, 2004-12-23)

우리나라 폐미들의 80%정도는 독신자들이다. 결혼을 안 한건지 못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가족이라는 경험이 없는 만큼 폐미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이 어떻다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가족에 관한 정책을 바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독신자가 가족을 관리, 2004-12-23)

어떻게 폐미들한테 가족을 맞길 수 있지. 폐미들의 목표는 가족해체인데 (여성가족부 개편 기사에 달린 악플, id=아예막나가는구나, 2004-12-25)

1.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2003.3.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논의 시작. 여성부와 여연은 환영

2003.8-10.가정학계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제기, 사회복지학계가 이에 대응하여 가족지원기본법안 제기

2003.11.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가정학계와 사회복지계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기로 함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국회보건복지위에 '여성주의적 관점 결여된 가족관련 법안제정 반대한다' 건의문 발송¹⁾

2004.1. 여성부에서 '전국가족조사' 실시 결과 및 정책전망 발표

1) ““건강가정”으로 상정되는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육성이 특정 가족형태의 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지며, 특히 전통 가족기능 약화의 원인을 가족구성원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도덕성 약화로 보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돌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 될 수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가족의 위기는 남성 중심의 가족주의에 대한 위기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여성이 가족 안에서 담당하던 돌봄 노동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기능이 약화된 것이므로, 가족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족지원기본법에서도 가족 위기의 원인을 가족구성원의 책임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어 건강가정육성기본법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 노인부양의 문제, 결혼해체 등을 가족위기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두 개의 법안은 결과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으로 가족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회보건복지위에 발송한 건의문 중. 밑줄은 인용자. (2003.11.27)

- 2004.1. 노무현대통령이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한 정부조직 분장방안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정부혁신위원회가 각계 의견 수렴 시작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출산, 보육 등 일부 보건복지부 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찬성
- 2004.2.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기법', 보건복지부 소관) 제정.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관련 논문 속출.
- 2004.3.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확정. 여연이 환영성명 발표
- 2004.3. 건강가정시민연대 발족 (가정관련 36개 회원단체)
- 2004.6. 여연이 가족정책 관련 간담회, 연속토론회 등 개최
- 2004.7. 여연이 건기법에 대해 '대체입법'으로 대응방향 확정.
- 2004.9. 여연 중심으로 '가족지원기본법(가칭)제정공대위' 발족 (여연, 민우회, 여진, 여성학회, YMCA, 참여연대 등 7개단체)
- 2004.9.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조정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가족부"를 지향하며 중간단계로서 (가)"가족여성청소년부" 신설안 검토 (정부혁신위가 제안한 초기 입장)
: 보건복지부 소관 이동,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내용 -> 보건복지부 결사반대
: 문화관광부 소관 청소년 업무(정보위 포함)를 여성부로 이관한다는 내용 -> 문화관광부 결사반대
문화연대, 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교조, 시민문화네트워크 등도 반대성명 발표
: 여성부는 현 행정체계 내에서 최선책으로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 주장
: 여성부의 당치 키우기 식 '부처이기주의'라고 비난
- 2004.9. 건강가정시민연대에서 업무 이관 반대 성명 발표 (건기법을 잘 실행하고 보완하면 된다는 요지)
- 2004.12. 정부혁신위가 가족업무만 여성부로 이관하여 (가칭)'여성가족부' 신설한다고 발표 (현재 국회의결 앞두고 있는 상황)
: ①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건기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여성부 소관으로 이관
② 가족보호 및 출산정책을 여성부의 기존 기능과 연계하여 총괄 추진
③ 여성부 소관이었던 남녀차별의 조사/판단/처리 기능을 국가인권위로 이관
- 여연이 환영성명 발표
: ①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문제를 성인지 시각에서 분석
② 부모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 여성이 노동권 보장받도록
③ '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빈곤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서비스체계
④ 법제도상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 부부간 평등권 확보를 이한 법개정
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현행 그대로
⑥ 국가인권위에 남녀차별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구조 갖추도록 요구
-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12월22일, 지은희장관 주재)
: ① 가족의 안정성 강화 (가족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이혼가족지원강화, 위기가족 one-stop지원)
②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 (지원 강화, 출산 양육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확보)
③ 남성의 부모역할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④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돌봄의 사회적지원망 구축 위해 가족-학교-사회연계시스템 마련, 돌봄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 가족친화적 여가문화 확산
⑥ 이 모든 가족정책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 2005.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 노동부, 여성부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 발표
: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도 해소될 예정. 대신 인권위법 개정하여 전문위원회 둘 예정. (국회 제출)

2. 구린 '위기' 담론이 확산되다

- 그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 : 세계 최저의 출산율 1.19% (2003), 이혼율 증가, 비혼 인구 증가, 고령화 등
- 즉 이성애 핵가족의 해체를 '가족 해체'로 비약. 그리고 그것을 '위기'로 가치평가.
- 그런데, 정말 도대체 무엇이 왜 위기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3. 앞뒤가 심하게 뒤바뀐 : 무엇을 위해 가족업무를 가져오나

- 여성부가 너무 힘이 없다는 건 맞다. (지자체도 우습게 여기는 부처, 타 부처의 이해도와 동의도 떨어짐. 예산/인력/권한 취약, 존폐론 제기, 하루도 그칠날 없는 사이버 마초들의 테러 등)
- 그러나 덩치를 키우는 것(관할업무/예산/인력 불리기)과 '힘/영향력/사회적 동의'를 키우는 것이 꼭 같지는 않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건 덩치 키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다.
- 덩치 키우기 위해 소관업무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본말전도다. 그것도 하필 '가족유지'와 '출산기능(?)'을 가져와서.
-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여성부는 여성운동의 성과물이지만, 여성운동이 여성부가 된 건 아니다. 감정이입 좀 덜해도 되지 않나.

4. 심란한 이유, 토론해보았으면 하는 단상들

1) '가족'을 정부부처 이름으로?

- '가족'이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족 위기' 담론에 대한 보수주의(가부장제)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가족은 이미 너무 심하게 보호되고 있다.
- 가족 해체를 방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정부부처 이름에 공식 언급될 정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퇴행 아닌가?
- 레이거니즘, 대처리즘의 예를 보아도, 정부가 '가족' 강조하기 시작하는 건 좋은 징조가 절대 아니다.

2) 평등한 가족? 다양한 가족?

- 평등한 가족? 가족은 이성애제도와 성별분업에 의해 움직인다. 정말 '평등' 하려면 기존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야 (즉, 더 이상 가족이 '그 가족'이 아니게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족이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인 이상) '평등한 가족'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 다양한 가족? 정말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가족은 '해체'되고 있지 않다(해체되고 있는 건 이성애핵가족 뿐이다). 해체되고 있지 않다면 예방할 것도 없고, '위기'도 더더욱 아니다. 기존의 가족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만 끼워 넣고 있지 않나?
- 동성애자 커플, 비혼 여성 공동체 등이 부모-자식으로 구성된 이성애핵가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나?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말을 유지하면서 가능할까? '다양한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려면 기존의 '가족'이라는 말이 먼저 충분히 의문시되고 상대화되어야 한다.²⁾
- “찾아야 할 것은 대안 가족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대안이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는 더 넓은 틀에서 상상해야 할 것이다.” (이박혜경, “끼어들기에 반대한다”, 2004-7-17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상토론회 발표문)

3) 어머니/아내/딸에서 겨우 '개인(시민)'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하나?

- 가족이라는 틀(frame)로 정책을 사고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다. 단독가구도 인정한다고? 왜 '개인'이 아니라 굳이 '가구'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가?
- 이미 너무 많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더 많은 인력/예산/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쏟는다는 건, 가족 바깥에 있는 개인들에게 돌아갈 인력/예산/관심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 가족 안/밖을 나누는 선 자체에 차별이 있다. 그 선을 다르게 찢려면 “사회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라는 전제 자체를 먼저 흔들어야 한다. 사회의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개인이다. 정책의 대상 역시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 '개인'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가족정책'이라는 말 자체도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2) “여성주의 가족정책에서 목표는 불평등 제거만이 아니라 여성/남성을 포함한 근대적 이분법을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필히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 다양한 것들은 고정적이고 안정되게 다양한 채로 서로 간에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다양성이 아니라 경계 침범과 혼돈의 상태이며, 정치적 정체화이자 정체성의 거부와 동시에 일어나는 투쟁의 상태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의 해체는 이러한 혼돈과 투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박혜경, “끼어들기를 거부한다”, 2004-7-17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상토론회 발표문 (미간행)

4) 여연이 여성계를 대표할 수 없다.

- 건기법은 말할 것도 없고, 여연이 중심이 된 가족지원기본법제정공대위(이하 '공대위')가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가족지원기본법(안)' 역시 부분적이고 보수적이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단독가구와 공동생활가족을 제외하지 않는 등 건강가족기본법보다야 확실히 낫지만, 가족을 여전히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공동체'로 보고 있고, 그 외 공동체는 가족 유사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틀이며 가족 '바깥'을 필연적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다.
-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가족에 대해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다. 여성부-여연-여성계 라는 식의 균질적 집단화를 깨야 한다. 여연은 여성계가 아니며, 여성계를 '대표'할 수도 없다. 여성부의 존재위기가 여성운동의 위기는 더더욱 아니다.
- '여성계'가 단일하지 않아야 여성운동들이 말할 공간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어떤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 더 넓어야 할 것

→ 여성부가 대한 논제 맞음

→ 여성운동계가 아니지.

여성운동의 대변을 맡겨야.

참고한 자료들

9. '여성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증거를 찾아라.

'여성계'라는 단어가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하라고요?", <시민의 신문> 2005-1-26일자 기사

"모든 '차별민원'인권위로", <여성신문> 2005-2-4일자 기사

이박혜경, "끼어들기에 반대한다",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상토론회 발제문 (2004-7-17)

이지선, '정상가족이테올로기와 법률', 월간언니네(<http://www.unninet.co.kr>) 2005년 2월 특집 "정상가족명절사비판" (2005-2)

여성부,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 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자료집, 2004-1-19

여성부 홈페이지 뉴스란에 실린 관련 기사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토론회 자료집, 2003-10-22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건의 공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women21.or.kr>) (2004-11)

한국여성단체연합, <'일-가족 함께' 양성평등 가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토론회1 - 가족위기? 가족변화? - 가족개념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자료집, 2004-6-29

한국여성단체연합, <'일-가족 함께' 성평등 가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 - 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한다> 자료집, 2004-11-10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발표문, "여성가족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2004-12-17)

건강가정기본법령집

• 정부가 "가족"을 작곡 들먹이는 이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임) '가족'에 이관시키기 위해.

• 건기법. 보수화.

• 다른 흐름들: 한국세월 가족.

• 한국의 여성운동의 아젠다를 어디로 가는가?

9. '여성가족부'가 가지는 상충성. 여성을 가정만을 이야기해야 하나?

• '여자'가 불연속 여성이 존재해야 할 듯한 느낌. ~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논제 맞음.

• 프로젝트를 여성부에서 맡아보면서 가난한 여성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

→ '여성가족부'는 상충성을 둘러싼 제각각의 생각.

• 여성을 연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임. 4 -